

문서번호 : 12-10-사무-13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전명훈 간사/T.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10월 27일, 민변 쌍용자동차 해고자복지과 국정조사 촉구를 위한 삼보일배
배 행진
전송일자 : 2012. 10. 26.(목)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10월 27일, 민변 쌍용자동차 해고자복지과 국정조사촉구를 위한 삼보일배 행진 진행예정

- 일시 : 2012. 10. 27.(토) 오후 2시~4시
- 장소 : 대한문앞 기자회견 후, 대한문-광화문사거리-정부종합청사 정문앞까지 삼보일배로 이동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청문회를 통하여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문제와 국가폭력 문제에 대하여 일부 진상이 밝혀지기는 하였으나 청문회의 한계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복지문제에 누구하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 가운데 쌍용자동차에서는 23번째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10월 27일(토)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부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앞까지 '쌍용자동차 해고자복지과 국정조사 촉구를 위한' 삼보일배를 진행합니다. 이번 민변 삼보일배에서는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을 비롯하여 민변 변호사 1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4. 민변은 삼보일배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및 국가폭력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해고자 복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5.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별첨> 기자회견문을 참조하시어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mblabor@chol.com /010-4373-0518)

별첨.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국정조사 촉구를 위한 삼보일배 행진 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국정조사 촉구를 위한 민변 삼보일배 행진 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 자본이 2009년 비정규직 노동자 600여명을 포함하여 3,000여명의 노동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한지 3년이 지났다.

2012년 3월 마지막 날, 열아홉 살부터 14년 동안 내내 쌍용자동차에서 일하던 서른 세 살의 총각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정리해고 후 22번째 희생자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22번째 사망자 이후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었다. 이미 스물 두 명의 생명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힘들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헛된 것이었다. 지난 10월 8일 쌍용자동차로부터 희망퇴직을 당했던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그는 삼 형제가 함께 공장을 다니던 중 희망퇴직을 강요당했다고 한다. 공장을 나온 노동자는 스스로를 돌볼 수가 없었다. 23번째 희생자였다.

국회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쌍용자동차와 정부에게 정리해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였지만, 해고노동자 중 단 한 명도 복직되지 아니하였고 쌍용자동차 자본이나 경영진 중 누구도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는 커녕 당사자들 간의 만남조차 철저히 거부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가고 희생자만 늘어갔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으리라 믿고 싶었던 우리는 어리석었다.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져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했던 우리는 어리석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19대 국회가 국정조사에 신속히 착수하여 해고자들과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해 줄 것이라 예상했던 우리는 진실로 어리석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가 외쳤던 법정에서의 주장도 거리에서의 아우성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희생자들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었으나, 우리는 위로가 되

지 못하였다.

우리는 옆드려 희생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한다.

그리고 쌍용자동차에서 일어났던 불법적인 정리해고가 바로 내 이웃, 내 가족에게도 일어나 한순간에 생존의 근거를 앗아갈 수 있음을 옆드려 알리고자 한다.

내 이웃, 내 가족이 쌍용자동차의 희생자와 유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을 향해 알리고자 한다.

내 이웃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현실을 끝내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내몰았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회의 국정조사는 필수적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해고의 불법성이 밝혀질 때 비로소 해고자 복직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옆드려 국정조사와 해고자복직을 촉구한다.

2012. 10.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